

정부·새누리 문화도시특별법 취지 잇단 훼손

‘지역민 우선 고용’ ‘亞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삭제 개정안 발의 법안처리도 사실상 무산... 전담 운영주체 결정못해 9월 개관 차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별법)’ 처리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 뒤집기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8일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가 ‘기성회비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취소되면서 오는 14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별법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야가 합의한 하번 9일, 12~14일에 ‘교문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아특별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여전히 강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도 아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야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9월 공식 개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 등 개관 준비를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정규직 423명과 비정규직 200명 등 623명 규모로 운영해야 하지만, 아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력 충원을 못 하고 있어 현재 개발원은 200여명의 인력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다. 나아가 200여명 가운데 정규직이 41명에 불과한데도 아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약마져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담 개관에 대비해 새로운 전담 조직을 움직일 인건비 100억원을 책정했지만, 전담 설립이 늦어지면서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

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담을 법안에 위탁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조항과 제3자가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아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박해자 의원에 따르면 우선 현행 아특별법 제10조 ‘문화예술 진흥’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같은 조항 4항에는 광주시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요청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또 현행 아특별법 제41조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개정안을 통해 ‘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법 제28조 7항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부산에 아시아문화원을 세우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두 번씩이나 취소하면서 아특별법 개정안을 발목 잡고 있고, 그 와중에 아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건이나 발의한 것을 보면 아특별법을 훼손하고자 하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13~22일 부처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22일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중점 정책 등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가 있는 업무보고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애초 발표된 바와 같이 정부업무보고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2주에 걸쳐 5번에 나누어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기관은 28개 기관으로 17부 5처 5위원회 1청이다. 4대 국정기조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감안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가 지난 2년 동안 국정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업을 통해서 마련하기를 당부했다”며 “이에 따라 업무보고는 부처별 합동보고에 이어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주제별 총괄보고와 각 부처 장관의 주요 과제 보고, 공통주제 발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첫날인 13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사회복지공무원 73명 선발

전남도는 8일 “사회복지공무원 73명을 선발하는 201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도 누리집(http://jeonnam.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조기에 채용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직렬의 공채 시험과 별도로 시험을 시행한다.

올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신규 채용 규모는 총 73명으로 일반 62명, 저소득층 2명, 장애인 3명, 시간선택제공무원 6명이다.

응시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원서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3월 14일 실시하고, 5월 7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114만7356명

광주시는 201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7356명, 주민조례제정 및 폐지청구 주민총수 114만7107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6408명을 각각 확정해 9일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공표된 총수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 등이 포함됐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492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민조례제정 및 폐지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496명이 연서해 조례 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8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돼지농장 입구에서 한 방역요원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연현스



구제역 농식품부 앞마당도 뚫렸다

세종시서도 돼지 226마리 살처분

세종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세종시는 연서면 와촌리 한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어미 돼지 3마리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같은 동(棟)에서 함께 사육 중인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14개 동으로 이뤄진 이 농장은 돼지 3천693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농장 500m 이내에는 28가구에 9459마리의 우제류(돼지 2가구 6000마리·소 26가구 3459마리)가, 3km 이내에는 219가구 2만2833마리(돼지 6가구 1만6000마리·소 213가구 6833가구)가 사육되고 있다. 지

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돼지농장과는 19km 떨어져 있다.

시는 이날 구제역 신고 농장주와 사육 가족의 이동을 제한한 데 이어 3km 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를 긴급 소독했다. 또 시와 농협의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축사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소독을 하는 한편 시 공무원 70명과 공수의 8명을 농가별로 지정해 소독 및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훈희 시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는 빠짐 없이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 차량,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AI 못막아 4년간 재정부담 3조원

살처분 보상 1조8500억

정부가 최근 4년여 사이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려 3조원 가량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와 돼지, 닭과 오리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피해농가에 지급한 예산만 1조8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한 2011년의 살처분보상금이 1조6032억원에 달한다. 2010년 11월~2011년 4월 당시 소와 돼지 등 가축 347만여마리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살처분보상금과 소독·방역비용, 농가생계안정

자금 등으로 총 2조7383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2010~2011년 유행한 AI로는 가금류 647만3000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822억원이 지급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가금티푸스, 결핵 등 다른 가축질병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으로만 각각 993억원, 227억원이 들었다.

지난해에는 AI 유행으로 닭·오리를 사상최대인 1500만마리 가까이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AI 발병에 따른 살처분 닭과 오리가 1285만 마리였던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피해보전에 살처분 보상금 1240억원, 생계안정자금·소득안정자금 150억원, 방역비 480억원 등 약 1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현스

경축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불백 (6,000원)

625세대안리는안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공부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척한소장수**는 불경기용 맞춤프랜즈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